

보육정책대토론회

정부의 민간보육시설확충 계획 “차질위기”

‘아동시설로 용도변경’ 거의 불가능, 폐쇄될 가능성 커



▲지난 24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간탁아의 확충에 필요한 보육정책 대안이 제기되었다.



▲주제발표자 허선 씨.

민간탁아소가 감소될 위기에
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4년 1월14일까지 영유아보
육법이 정한 시설기준에 '노유
자시설(노인·아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마쳐야 하지만 조

사결과 민간탁아소75.3%가 용
도변경을 아직 못했고 42.9%
는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마감일을 석달 남겨 놓고 전
국 6대도시의 보육시설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민간탁아소
의 절대다수가 '노유자시설로
의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24.7%만이 용도
변경했을 뿐 "변경예정"이라고
응답한 곳은 32.5%, 나머지
42.7%는 "변경하지 않겠다"
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건
물주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
다'가 47.1%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에 따르는 비용부담
이 커서' 20.6%, '건물자체
의 하자로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 20.6%였다.

또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가정보육시설로 전환할 계획
이다'는 2.9%, 아예 '시설운
영을 그만둘 것이다'로 응답
한 경우도 8.8%로 나타나 정
부의 민간보육시설중심의 시
설확충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24일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가 YMCA강당에서
마련한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용도변경
완화책'이 시급하며 정부가
시설기준 완화 대신 보육료
표준단가제를 없애고 시장경
제에 따라야 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론이 주로 제기됐다.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정책
대안〉을 주제발표한 허선 씨(
중앙대 사회복지 박사과정)는
"국공립 등 큰 규모의 보육시
설일수록 표준보육단가가 필
요하다"며 보육단가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계층별,
규모별에 따른 차등 표준단가
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또
보육료 대상선정 기준을 재정
비하는 '소득인정기준안'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정부의 현행 아동보육료 지
원기준은 맞벌이를 전제로 월
평균 가구소득 총액이 70만
원 미만. 그러나 명확한 지침
이 없어 지역별로 대상선정에
혼선을 빚고 있고 빈민지역의
가구원들은 지원서류인 월급
명세서조차 발급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허점으로 다시 거론됐다.

또 다수의 빈민지역 가구들
은 월평균소득 70만원을 상
회해도 소득의 상당부분을
전·월세비나 만성질환가족
의료비 등의 지출로 실제 소
득은 70만원 미만이지만 지
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
리가 커 이런 항목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소득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안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육료지
원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처럼 '기준선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64.1%로 가장 컸고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응
답이 22.1%를 차지, 소득인
정에서 가구지출형태가 반드
시 고려되고 신청서류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
났다. <박혜숙 기자>